

대학교육의 개혁에 대한 제언

김영한

숭실대 철학과 교수



한국의 경제력은 이제 1만 불 시대가 열리고 있다. 1950년 한국전쟁 후의 폐허 속에서 이제 한국은 세계를 향하여 뻗어 나가고 있다. 스포츠, 종교, 예술 등 각 분야에서 우리 사회의 발전은 지난 날에 비하여 팔목상 대하게 발전해 왔다. 유엔의 비상임 이사국에 진출하게 되는 등 국력의 신장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대학교육의 현실은 예나 지금이나 발전된 것 없이 구태의연한 현실 속에 안주해 왔다. 국민들의 강한 교육열 속에서 대학은 치열한 경쟁을 통하여 학생을 마음대로 선발하나, 이미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은 자극 없이 4년을 보내어 아까운 두뇌들이 더 이상 개발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곳이 한국의 대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대학의 停滯性은 교육부의 관료행정의 온실 속에서 타율성에 익숙해왔다는 데 비롯된다. 한국의 명문이라는 서울대학이 세계 수준에 훨씬 못미치는 시설과 수준이라면 다른 대학들은 말할 필요조

차 없는 것이다.

이번 5월 31일에 발표된 정부의 교육개혁안은 이러한 폐습을 고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개혁안에 의하면 교육부는 대학교육의 자율화를 인정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유발하기 위해 대학종합평가를 시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만시지탄의 느낌을 가지나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대학의 개혁을 위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부는 대학교육에 대한 관료적 획일적 규제를 그치고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정책을 실천적으로 펴나가야 할 것이다.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역할은 여태까지 도움을 주는 곳이기보다는 감시와 규제를 하는 관청이 되어왔다. 교육부의 규제는 대학의 증원, 증과, 신설 등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상명하달식 방식으로 나타났었다. 그리하여 대학이 창의적으로 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한 학과나 특수대학원을 개발하고자 하여도 교육부의 규제에 사장되

는 경우가 비일비재 해왔다. 이번 교육개혁안에는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대학설립을 자유롭게 하는 대학설립의 준칙주의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의 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대학이 학교현장을 자율적으로 제정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이행 여부를 평가대상으로 삼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것은 발상을 전환케 하는 바람직한 착상이다.

둘째, 대학 입학, 전학 및 편입의 문호를 개방하고 졸업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부하는 대학이 되도록 한다. '전부 아니면 무'라는 확실적인 제도 때문에 수험생이 시험을 잘못 치르면 하루아침에 공든 탑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 한국의 대학입시 제도이다. 그리하여 젊은 인재들이 재수, 삼수, 사수까지 하면서 명문 대학에 들어가려고 아까운 황금의 시간을 소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과거 군사정부는 교육평준화라는 이념 아래 명문 중·고등학교들을 폐쇄시킴으로써 사립이든 공립이든 각급 학교들의 자유로운 교육 공급서비스 경쟁을 차단시켜 버렸다. 그리하여 학부모들은 연간 17조 원에 이르는 돈을 과외공부에 퍼붓고 있는 것이다.

고교 학생들이 공부에 지칠대로 시달리다가 어려운 대학입학의 경쟁을 뚫고 들어오면 더 이상 공부하지 않는 곳이 오늘날의 대학 풍토이다. 학사경고를 받아 탈락하는 학생들이 있으나 그런 경우는 드물고 적당히 공부하면 누구나 졸업할 수 있는 곳이 오늘날의 한국 대학이다. 그리하여 대학생들은 그 우수한 두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발전하기는커녕 대학 4년을 지나는 동안에 두뇌가 사장된 경우가 많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문호를 넓게 개방하고 졸업을

엄격히 규제하되, 지난날 실패한 졸업정원제가 아닌 엄격한 기준에 도달하는 자를 정원에 관계 없이 졸업시키는 졸업시험제를 도입했으면 한다.

이번 교육개혁안에는 대학의 정원과 학사운영의 자율화를 보장하고 있다. 이것은 바람직한 조치이다. 정부는 대학에 정원을 완전히 일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하여 대학간에 선의의 경쟁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설립하는 '교육과정평가원'이 대학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그에 따라서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대학의 질이 자율적으로 평가되는 방향으로 유도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교육개혁안에는 학생이 언제 어디서나 객관적으로 평가된 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 학점을 인정해주는 학점 은행제를 도입하고 개인 사정에 따라 시간제로 등록하여 직장과 병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번 개혁안은 대학 사이의 편입학도 허용하고 있다. 이것도 대학간의 우열의 장벽을 허무는 좋은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이것은 대학간의 교류를 확대시켜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재수를 선택하는 낭비를 사라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전학과 편입의 허용은 입시생으로 하여금 먼저 자신의 적성과 실력에 맞는 대학에 입학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대학의 양질 평준화 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국내 어느 대학에서 공부하더라도 동질의 교육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학에 엄청난 교육부자를 해야만 할 것이다.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대학에는 정원의 테두리 안

에서 편입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대학의 경우, 모든 대학이 역사는 다르나 평준화되어 있어서 정원 내에서 자유롭게 이 대학 저 대학으로 옮겨 유명한 교수들의 강의를 듣고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다.

대학 신입생의 연중 모집 그리고 다단계 선발도 입시경쟁을 줄이고 학생들이 여러 대학에 자기 적성과 취미와 실력에 맞추어 갈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 이것은 진학생들로 하여금 현재의 한두 대학만을 지원하도록 하여 낙방하면 우수학생들이 재수하도록 하는 현 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본다.

미국의 하버드와 예일 등은 9월의 신학기에 앞서 3월경에 신입생을 모집하고 다른 대학들은 4월이나 5월 등 각기 다른 시기에 신입생을 모집한다. 그리고 미국 대학은 신입생 선발도 한번에 전체 학생을 선발하지 않고 다단계로 한다. 성적이나 지역별 또는 소수인종 등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서 전체정원 중 일부를 뽑고 나머지 인원은 다른 시기를 택해 그때 그때 선발한다. 이같은 연중모집 또는 다단계 선발은 대학의 입학 문호를 넓히고 복수 지원기회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

일본 게이오 대학은 면접선발제(admission office)를 1년 내내 운영하고 있다. 고교성적이 최상위급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추천자격이 주어진다. 필기시험 없이 면접만으로 합격 여부가 결정되며 면접은 교수 3명과 30분간 치열하게 진행된다. 입시면접은 일년 내내 이루어진다. 이 제도는 한국 대학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특차전형과 비슷하나 수능시험성적 없이

고교성적과 본인면접 그리고 일년 내내 시행된다는 점이 한국의 제도보다 융통성이 있어 보인다.

셋째, 상호 연관있는 학문을 묶어 학부제를 시행하고 2~3개의 전공을 택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학문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고 대학원에서 세부 전공을 공부하게 하는 제도를 마련했으면 한다. 이번 5·31 교육개혁안에는 최소전공학점인정제가 도입되도록 되어 있다. 총 학점수를 이제까지의 140점에서 1/4 내지 1/6인 35~23점 정도로 낮춘다는 것이다.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들이나 일본의 게이오 대학은 전공학점을 대폭 낮추고 학문분야도 몇 개를 하나로 묶어 전공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 대학에서는 물리학과 신학 등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복수전공도 가능하다. 경제학과 미학의 복수전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복수전공의 제도는 학문계열의 차원을 넘어서 학생이 자기적성을 찾도록 하는 것이다. 대학 교육은 교육하는 당국이나 학교의 편의가 아니라 교육받는 학생의 입장에서 사고하고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가 정책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들처럼 학부과정에서 학과 소속 없이 폭넓은 교육을 받게 한 후 대학원에서 특정연구를 수행케 한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철학-정치-경제학 과정이나 공학-경제학-경영학 과정처럼 몇 개의 학문을 복합적으로 구성해서 복합 전공케 하는 대학모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전문요원의 양성을 위해 학부 없이 별도의 전문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일본의 국제 기독교대학에는 학부에 세부적

인 과들이 없다. 단지 인문대학, 사회대학, 자연대학, 경상대학 등의 학부만이 있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문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시간제(part time) 등록제를 이번 교육개혁안은 제시하고 있다. 바람직하다. 이 제도는 학점당 등록하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다 뺐을 때 졸업을 허용하는 제도로 졸업연한이 폐지된다. 경제적 사정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는 대학생은 없어지게 된다. 4년간의 학제가 10년 또는 평생으로 연장되는 셈이다. 대학에서 한 강좌의 수강도 가능하며 이 강좌에 해당하는 학점당 등록을 하는 제도이다. 직장을 가진 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영·미 등 외국에서는 시간제 등록제 도입이 활성화되어 전일제 등록학생수와 시간제 학생수가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87년 현재 시간제 학생수가 전체 학생의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95년 현재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에는 시간제 등록 학생수가 2,499명, 미시건 주립대에는 3,825명이나 된다. 영국의 경우 지난 70년부터 87년까지 전일제 학생수는 평균 29% 증가한 데 반해서, 시간제 학생수는 4배에 달하는 평균 118%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넷째, 대학은 교원 승진능력제를 시행하고 유능한 교원을 양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다양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교수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일정 주기로 연수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안식년 제도를 실시한다. 또한 책임강의시간을 9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이고 한 주에 15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여 질적인 강의를 도모하고 교수가 연구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든다. 또한 『교수연구목록』을 발행해서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고 승진 시에는 객관적이고 엄격한 조건을 충족하도록 해야 한다. 근무연한이 차면 자연승진되는 것이 아니라 승진 심사를 이해관계가 없는 타대학의 원로 교수들에게 의뢰해서 능력 위주의 승진이 되도록 해야 한다. 아직도 한국의 대학에서는 전임강사나 조교수의 임용이 바로 정년보장으로 간주되는 실정이다. 승진 유보나 재임용 탈락이란 아직도 우리 대학사회에서는 신문기사감이 될 정도로 드물다. 그러나 미국의 대학사회에서는 조교수에서 부교수로의 승진은 결코 쉽지 않다. 정년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뚜렷한 학문적 성과를 인정받아야만 한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우리 대학도 도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부교수에서 정교수로의 승진에도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하고 정교수에 대한 예우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진국에 비하여 한국 대학은 거의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는 대학교육을 위하여 우선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국내 대학의 질을 세계적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도서관 및 각 학과마다 세계적 저널의 배치, 첨단 실험기자재의 마련, 각종 시설 확충, 연구비 확보 등 엄청난 투자가 필요하다. 정부는 GNP 5% 교육재정 부담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국·공립대학의 입학금과 수업료 등은 정부 부담이 아니므로 교육재정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각종 기업과 사회기관이 대학에 기부금을 헌납하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대학은 등록금 이외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재단과 협의해서 구상해야 할

것이다. 국립으로 운영되는 독일·프랑스·스위스·오스트리아의 대학에서 재정의 80%를 정부가 부담하는 것에 비하면 GNP 5% 투자란 결코 정부가 큰일 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연간 17조 원이라는 엄청난 사교육비를 공교육 부문으로 끌어들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대학은 학문외적 활동을 금하는 엄격한 학사제도를 시행하고 학생 취업시 성적과 아울러 생활기록부를 반영하는 것도 연구해 보았으면 한다. 아직도 우리의 대학은 공휴일, 과 축제, 과 MT, 체육대회, 오리엔테이션, 각종 동아리 활동 등으로 휴강이 잦다. 이러한 학문외적인 각종 활동은 휴강을 자주 유발하고 학생들의 마음을 들뜨게 하며 학문적 분위기를 해이하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독일이나 미국 대학의 경우 공식 절기인 부활절, 성탄절을 제외한 다른 공휴일은 대학의 학사일정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 뿐만 아니라 과 축제나 체육대회, 오리엔테이션, 동아리 활동으로 인한 휴강이란 단어는 아예 없다. 이것이 서구 대학의 문화이다. 이제 우리 대학도 자율적으로 스스로의 대학 문화, 연구하는 상아탑의 문화를 창출해 나가야 한다.

한편, 인성교육이 중시되고 있는 요즘, 우리 대학은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아무런 권위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 기업체 취업시 제도적으로 대학의 학과성적과 아울러 대학 생활기록부를 참조하여 면접 전형을 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아야 할 것이다. 오늘날 한국 기업의 노사쟁의가 단순한 노사간의 문제를 넘어서 정치투쟁화하고 있어 우리 기업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기업이 취업자들의 대학에서의 생활과 인성을 무시하고 시험 위주로 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체 시험뿐만 아니라 각종 공무원 시험에도 이러한 생활기록부를 반영하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능력 위주의 선발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인성이 강조되어야 하므로 대학교수의 추천이 반드시 동반되도록 한다. 그리하면 교수의 가르침이 학생들에게 설득력을 가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이다.

교육을 받고자 하는 수요는 날로 폭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교육 서비스는 질과 양을 제대로 충족시켜 주지 못했다. 많은 학생들이 비싼 등록금을 내고 대학에 들어오나 교수의 강의 내용과 학생들의 학습량, 리포트, 대학의 도서관이나 각종 시설은 선진국의 수준에 비해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교육개혁 방향은 옳다고 본다. 교육부가 통제를 그치고 자율화를 보장하며 재정지원을 과감히 할 때, 각 대학들은 자율적이고 경쟁적인 분위기 속에서 발전해 나가며 자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수한 대학은 더욱 발전하고 수요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대학은 도태하는 풍토에서 한국 대학은 스스로 서는 인센티브와 창의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

김영한/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철학박사(74년), 신학박사(84년) 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숭실대 철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숭실대 교목실장,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장 및 기독교학술원장 등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 『하이데거에서 리퍼프까지』 등이 있고, 『포스트모던사회의 개혁신학』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